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인원수' 전국 18개 시·도 중 1위 기록 전남자치경찰위, 데이터 분석 통한 시설개선·캠페인 등 성과

전남지역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인원수가 전국 18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7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인 200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1년(255명)보다 55명(21.6%)이 줄어든 것으로 교통사고 통계 관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높은 고령화 비율로 최근 3년 동안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56%에 달하는 것에 착안해 교통 사망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과 노인 보호구역·마을 주민 보호구역 확대 사업,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 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 일반 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 화물차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여기에 전남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역주행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358건으로 2021년(8732건)보다 374건(4.3%) 줄었고, 부상자는 1만2590명으로 2021년(1만

3600명)보다 1010명(7.4%) 감소했다.

특히 65세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51명에서 110명으로 41명(27.1%)이나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론 승합차 사고가 9명에서 4명으로 55.6%, 농기계 사고가 14명에서 7명으로 50.0%, 화물차 사고가 76명에서 54명으로 28.9%, 승용차 사고가 108명에서 85명으로 21.3% 각각 줄었다.

다만 이륜차·특수차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4.2%) 증가한 50명을 기록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해 어린이·어르신 눈높이

에 맞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배달 오토바이·음주운전 등을 집중단속하고, 노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100곳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행 중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확대 운영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스마트교차로·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등 첨단 과학 시설을 적극 설치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대로 낮출 방침이다.

조만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 등과 지방-치안행정을 연계한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육과 홍보,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통해 계속해서 사망자가 감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여수소방, 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여수국가산단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물시설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ESS시설 및 수소충전소 교육·훈련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새로운 유형의 대응전략 체계 강화를 위해 세방전지광양물류센터와 하이넷 광양 성향 수소충전소에서 ESS시설 및 수소충전소 화재 대응방안 훈련을 진행하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생활안전순찰대, 2023년 소방복지서비스 개시

담양소방서는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들의 복지를 위해 구성된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순찰대'가 2023년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화재 발생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소방, 전기화재 저감 '트래킹 클리너' 운영 확대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가 이번 겨울철과 올해 연말까지 전기화재 저감을 위한 '트래킹 클리너'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무안=이기성기자



완도소방한국교통안전공단, 도서지역 대상 소방시설 비치 홍보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겨울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차량사업소와 협업체로 도서지역 소안도 금일도 출장검사소에서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26일 실시했다.

완도=기동채본부

'실업급여' 칼 빼든 정부... '액수·기간' 개선안 상반기 마련

고용부, 실업급여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

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제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

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안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방한용품 수요 증가

한파가 이어지고 가스요금도 무섭게 치솟으면서 방한용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파가 몰아친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7일간 손난로, 문풍지를 비롯한 방한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방한용품이 진열되어 있다.

1020마약, 5년새 150% 증가 "상황 심각, 예방교육 확대"

지난해 젊은 마약사범, 전체의 약 34%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과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범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 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